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여야 같은날 경선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취임 1년 기자회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여야가 내년 총선 공전부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 같은 날 경선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에서 일부는 전략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상황식 공천을 한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공천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해 의회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겠다”면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참여해줄 것을 야당에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험”이라며 “내년 4월 총선에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고 다음 대선에 어느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입법에 적용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대화와 타협, 합의와 협조가 살아 숨 쉬는 ‘합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1년 전 여야 대표가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공존정치 회의체’ 신설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취임 당시 공언했던 ‘수평적 당정관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수로 따지자면 스스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된다”고 자평한

뒤 “수평적 당정 관계를 위한 노력, 할 말을 하는 노력은 계속하겠다”며 “청와대와의 소통은 과거엔 잘 안됐는데 요즘은 아주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후속 당직 인선이 14일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첫째 기준은 내년 총선이고, 둘째는 당내 화합을 위한 탕평 인사”라며 “비경상도권의 사고와 시각을 가지고 선거를 봐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모든 당직은

“당직 비경상도권 배분

선진화법 개정하자”

새정치 “의회 독재 발상”

비경상도권으로 옮긴 하겠다. 탕평을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또 오는 25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DC에서 미국 정치권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 대해 “우리 당 역시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만큼 당시 실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진화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결코 찬성할 수 없다”며 “거대의석을 기반으로, 의회를 새누리당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야당은 물론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취임 1주년을 맞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총인슬러지 처리방법 변경 문제 심각”

김보현 시의원 주장

“감사원 감사 청구 하겠다”

광주시 총인슬러지 처리방법 변경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보현(서구2) 의원은 13일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총인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 시설 등 광주시 환경기초시설의 총체적 부실은 심각한 상황이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한 진실규명과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시운전 기간 중 이루어진 총인시설 슬러지 처리방법 변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의의 시정과 진실규명을 위

한 시의 자체감사를 촉구했으나 형식적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인슬러지 처리방법 변경 적정성에 관한 진실규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감사원과 같은 외부기관의 감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의 지하화’를 명분으로 총사업비가 690억이 투입된 광주시 제2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악취방지에 훨씬 앞선 사실이 광주시 환경기초시설의 현 주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환경기초시설 시공과 운영의 책임 당사자들에게 부실원인 규명과 시공사 하자보증 책임문제, 개선대책 마련을 맡길 수 없기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민선 7기 집행부의 비상한 결단과 실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양경제청, 신대지구 주차장 용지에 건축물 부당 허가”

감사원 적발, 4명 징격 요구

감사원은 13일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주차장 용지에 부당하게 건축물을 허가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대배후단지는 여수·순천·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에 걸친 5개 산업단지의 배후 도시로, 총 290만4000㎡ 규모의 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2년 5월~2013년 6월 신대배후단지 주차장 용지에 대한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음식점과 세차장을 주용도로 하는 건물을 허가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차장 용지의 경우 건축면적 70% 이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허가하도록 돼 있다. /연합뉴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또 사업시행자가 노외주차장 용지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결과적으로 노외주차장이 전체 사업면적의 0.6%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신대배후단지 내 3개 주차장 용지에 음식점 또는 세차장 등이 허가를 받아 난개발이 초래됐다고 4명의 업무담당자에 대해 징격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이 15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활동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점수가 66.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행정기관 70.3점, 광역자치단체 70.7점, 교육자치단체 70.8점이었.

우수 기관은 24개(15.8%), 양호 55개(36.2%), 보통 53개(41.4%), 미흡 11개(6.6%)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우수기관 명단만 공개하며, 전체 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무기계약직 ‘현대판 음서제’ 채용 확인

전남도, 5개 시·군 감사... 군의원·공무원 청탁 비공개 특혜도

전남도내 시·군이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등 소위 비정규직을 군의원이나 이장 등 외부인 추천이나 비공개 특혜 채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일보 6월 1~9일자 1·3면 보도〉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특정한 선별해인 사위원회의 심의·의결도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바꿔주는 등 일선 시·군의 인사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방선거 전후로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공직’이 ‘대개’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광양시와 곡성·고흥·무안·완도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비정규직 채용·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행위 8건을 적발해 관계공무

원 12명에 대해 징계 또는 훈계조치했다.

이번 감사 결과 A군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모두 127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 단순 사무보조 22명은 군 의원과 이장 등의 청탁을 받고 서류심사와 면접 없이 비공개 특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서 홈페이지 공고나 서류전형, 면접 등을 생략한 채 부서장의 추천만으로 비공개 특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군도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규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47명 가운데 전문지식이 필요한 20명은 공개채용한 반면, 경쟁과정을 거쳐야 할 단순사무보조원 등 27명은 홈페이지 공고나 면접 없이 실·과 추천

만으로 비공개 특혜 채용했다.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이나 전환배치 분야에서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D시는 홈페이지 공고 등 공개채용 절차 없이 특정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비공개 특혜 채용했으며 10개월 후 채용목적과 상관 없는 운영보조원으로 변경 배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E군은 지난 2013년 1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공개 채용절차 없이 무기계약근로자를 청원경찰로 비공개 채용했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F군은 기간제근로자 9명에 대해 전환평가나 면접, 인사위원회 심의·의결도 없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밖에 일부 지자체의 무기계약근로자 정수채용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가고 싶은 섬’ 2곳

내달 14일까지 공모

전남도는 민선 6기 브랜드사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2016년 사업 대상지 2개 섬을 오는 8월 14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대상 섬은 전남 소재 유인도 중 생태, 문화, 역사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시·군과 주민의 참여의지가 높은 곳이다.

신청한 섬에 대해서는 1차 사업제안서 발표를 포함하여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14일 시·군 담당 과장과 섬 주민을 대상으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오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접수받아 9월 초까지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9월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문화전당 일대 ‘문화거점’ 활성화해야”

새정치, 문화기관협 간담회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역 문화 관광객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전당 일대의 ‘문화거점’들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13일 시당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문화기관 대표들을 초청, 주요 현안사업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한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해자 광주시당 위원장과 서영진 광주문화재단 대표,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 등 지역 8개 문화기관

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영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아시아 문화전당 일대에 문화관광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구도심의 근대사 유적을 활용한 새단장을 통해 도심공동화 해소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이사는 사업비 38억원을 들여 개발하는 ‘광주 구도심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과 문화전당~대인문화예술시장~광주공원~양림동 등 문화거점을 연계해 12개의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권일기자 cki@

화순~광주 동구 제1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 대회

2015년 8월 15일(토) 오전 8시 출발

접수 및 문의 ☎(061)375-1288 http://marathonworld.kr/

장소 | 너릿재 옛길(화순~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발 | 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지원2동)
코스 | 너릿재 옛길 주차장~너릿재~화순 소아르 갤러리
종목 |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참가비 | 30,000원
기념품 | 타이즈
접수인원 | 선착순 1,000명(입금기준)

주최 (주)광주일보사 · (사)아시아문화 · 마라톤세상
주관 마라톤세상
후원 화순군 광주광역시 동구